『차기정부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국정어젠다』 토론회

"과학기술부총리제 강화해야 · · 교육부 · 산자부와 통합은 부적절"

글 | 서금영 _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꾸릴 새 정부에서도 기존의 과학기술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주최로 지난 12월 2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국정 어젠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부를 산업자원부나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이 당선자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

서도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기조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위축을 가져올까 우려하는 반응이었다. 과학기술부총리제의 출범과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신설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현 정부에서 미진한 부분은 새 정부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장재 KISTEP 정책기획단장

과학기술이 '3만달러 시대' 견인할 것

이날 토론의 핵심은 과총이 차기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다듬어 온 4개 분야 9개 항목의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였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들 9개 핵심 어젠다별 실천과제를 꼽고, 이명박 당선자의 과학기술 공약과 비교·분석했다.

이 단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창조형, 선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로의 전환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견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할 4대 중점분야로 신개념 '과학기술혁신'(STI)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이 단장이 제시한 신개념 STI 경쟁력 강화란 △과학기술종합행정의 관리자 역할에서 총괄기획조정자로의 전환 △과학기술 전문가 자문과 정책결정 참여 확대 △해외 우수인력과 국내 학계 연계 △이공계 대학 경쟁시스템 도입과 특성화 유도 △국내학술지의 질적 제고 등이 추진전략이다.

또 이 단장은 "미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기초연구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국가 R&D 투자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초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이 단장은 "개인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당선자도 연구자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연구비 공개 경쟁시스템 도입, 정부 R&D투자의 GDP 대비 1.25% 확대 등을 공약으로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책임을 약속했다.

'나 홀로' 과학기술에서 '사회 속' 과학기술로

토론회에 참석한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제도나 정책에 앞서 사람의 문제"라며 "앞으로 20년 간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될 노령화, 참살이 문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를 어젠다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국정 어젠다 가운데 총 R&D가 GDP의 5%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4.5% 정도가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분담 비율이 24% 가량으로 낮은 우리 나라 R&D의 정부 비중을 앞으로 30~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원 나리지 웍스 대표는 "정보통신이나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더 이상 선진국을 보고 베낄 것이 없어졌다"며 "눈에 보이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선진국이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재 출연연 발전협의회 회장은 "국가 경쟁력을 한 나라의 R&D 투자로만 본다면 중국은 우리의 20배, 미국은 100배"라며 "이를 뒤쫓지 못하면 우리 나라도 중남미 국가들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조 회장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7위, 기술 경쟁력이 세계 6위인만큼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는 나 홀

종합토론 모습들. 왼쪽부터 민철구(STEPI 선임연구원), 김성수(한국외국어대 교수), 조성재(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 홍형득(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로 과학기술이었다는 것을 넘어 사회 속의 과학기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방안인 '이노베이션 25'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담겨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과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맥락에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기부와 타부처 통합은 현실 모르는 이야기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이란 주제로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조 교수는 "현행 과학기술부총리제는 다른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절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못해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 기능을 강화해 부처별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한다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나돌고 있지만 이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소리"라고 단언했다.

또한 조 교수는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선수와 심판'을 함께 보듯 사업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종합 조정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러나 다른 부처와 달리 과학기술부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술의 사업화 등 다양한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현행 과학기술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과학기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아닌 과학기술 전문 부처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하고 국가의 R&D 예산이 미국의 20분의 1, 일본의 7분의 1인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전략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조 교수는 "과학기술부의 명칭을 산업과 정보통신, 건설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기술경제부, 과학기술연구부, 과학기술혁신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박방주 중앙일보 기자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학기술계가 쥐어준 것조차 담지 못하는 과학기술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참여정부로부터 부처 예산 총괄 집행권을 부여받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를 제대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도록 차기정부가 행정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기자는 "과학기술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해야 할 것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권을 분명하게 떼어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부총리제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어도 출연연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들은 여전히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로 뛰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R&D의 50% 기초과학에 투자한다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설이 나도는데 이는 매우 불행한 얘기"라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 만큼은 지난 40년 동안 노하우가 집약된 과학기술부는 그대로 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느냐"며 "제도과잉이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내부 소통이 잘 되도록 전문가 채널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 자문을 맡았던 전승준 고려대 화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작은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외

양지원(KAIST 부총장), 전승준(고려대 화학과 교수), 이철원(Knowledge Works 대표)

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과학기술부"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과학기술자에게 연구의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된 과학기술 공약이었다"며 "5~10년 이내 굉장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기초과학에 R&D의 50%를 투자하겠다는 것도 당장의 상업화를 고려한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차기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청중석에서도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이희일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도 민간에 넘길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를 대통령에서 민간으로 넘겨 현장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부탁했다.

연구 성과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박방주 기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적으로 평가를 맡겨야 한다"며 "연구원을 단 며칠 만에 뽑는 지금의 평가 방식으로는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 기자는 경원대 이길녀 총장이 조장희 박사를 초빙해 해마다 50억~60억 원씩 지원하는 사례를 들며 "업적 평가를 논문이나 특허 수로 한정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인기 분야를 따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초 · 원천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박 기자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연구원의 활동을 간섭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길 때 과학기술의 행정과 연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의 기초를 충실히 닦아야 할 때

더불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R&D가 10조 원에 이르렀지만 연구투자는 여전히 미약하고 우수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이는 R&D를 함께 쓰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같은 정부 부처간 예산의 조정과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부총장은 "연구 인력을 늘리는 게 이공계 위기의 해소는 아니다"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양 부총장은 "연구원도 변호사, 의사처럼 정예화해야 한다"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은 인원은 적지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학의 교수와 학생 모두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재인 과총 부회장(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과학기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회가 똑같은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는다"라며 "토론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하는 것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내부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영복 과총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에 '왜 당장 투자하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규제가 심하다' 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투자할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며 "창의력이 떨어지면 미국의 유행을 충실히 모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 회장은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의 기본을 충실히 닦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 이외에도 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과기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예산의 배분과 조정, 인재 양성 방안, 출연연 PBS제도, 과학기술의 대중화 같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새 정부에 거는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ST